

우원식 “총리·여당 권한행사는 위헌”

〈국회의장〉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당장 중단해야”…尹 직무정지 논의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매듭짓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나.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주체인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



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

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뜻을 한 총리에 게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공동담화문 발표 직후 우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회담 후 한 총리가 제게 전화했다”며 “(한 총리가) 오늘 담화 중 있었던 그것(내용)과 같이 제게 협력을 당부한다며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고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윤석열을 탄핵하라”... 여의도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민총불대행진에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 (사진=뉴스시스 제공)

성남 전북자치도민들 “윤석열 퇴진하라”

전에서 집회 열려... 국힘 투표 불참 소식에 도당까지 행진하기도

자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집회 초반 참석했다. 집회에서는 ‘윤석열 퇴진하라’는 구호가 연신 외쳤다. 촛불과 함께 이어진 집회가 이어졌다. 이호민(35)씨는 “군대는 엄연한 시민들의 군대고 시민들 만약에 전쟁이 터

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도당 앞에 모인 1000여명의 도민들은 “너네가 정당이나”, “표결에 참여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윤석열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사무실에 단 한명의 직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김재훈 기자

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를 향해 행진했다. 도당 앞에 모인 1000여명의 도민들은 “너네가 정당이나”, “표결에 참여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윤석열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사무실에 단 한명의 직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상춘곡, 조선왕조실록,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동진강 문화관’을 통해 동진강을 통한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며, 오명재 의원은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했고, 이도형 의원은 녹지축 조성 및 상가존의 블록단위 재개발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안전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고성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이민재·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황혜숙·오명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15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재) 소관으로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생활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경운·최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운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제3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내란수괴尹 즉각 탄핵하라”

“내용·절차에 하자있는 게임 위헌적이지 위협적... 내란죄”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시민단체와 각 정당 등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시위 등이 이어진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오승미 의원의 참석하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시 체포!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부결 당론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그러나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과 관련자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잘못이 없다.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헌적,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충을 겨는 사건이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내란 수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내란범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발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되어 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윤석열 방탄에 눈이 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부결을 기어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선 “국민에게 충부리를 겨는 윤석열 내란범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란범 윤석열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용서를 빌기회라도 얻을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 나라의 정당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끝끝내 윤석열 탄핵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정당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진보당은 국민의

힘 해체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권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의인 조배숙 의원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당론이 중요한가? 국민이 중요한가? 조배숙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당론을 거부하고라도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민약 조배숙 의원이 도민들의 뜻을 거스른 채 내란 부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정치판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순창군에서 오승미 의원이 당선돼 농민들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인 2023년 4월 5일 11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후보가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한동훈 담화문, 헌법·법률적 근거 없는 오만무도한 발상”

도의회,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한 대신 할 수 없어”

尹 탄핵안 불성립에 “국힘,尹에 부여하는 과오 범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 105명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탄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에 부여하는 짓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문과 관련,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오만무도한 발상이자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대변인인 서나이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에 부여하는 짓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며 “국민의 절대적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장 끌어내리고 내란 범법자들을 즉각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8년 전 국회는 대통령의 헌법적 임무를 방지하고 비선실세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탄핵했다. 윤석열의 죄상은 박근혜 탄핵 사유와 차이를 달리한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충을 겨누고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를 탄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던 보수의 양심은 어디로 갔느냐?”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지키며 탄핵을 거부한 것은 한국 보수정당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서 의원은 “국힘의 탄핵 거부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계엄 앞에서 국회의원 선서에 담긴 정치적 양심과 직업윤리를 걸어 버린 파렴치한 망동”이라며 “이제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 공생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입에 올린 8일 한동훈 대표 담화문과 관련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오만무도한 발상이자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한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한덕수는 위헌 내란 계엄을 심의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자로 우리는 윤석열의 모든 통치행위와 국정운영을 규탄하고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권력에 눈이 멀어 윤석열과 아합한 한동훈과 국힘으로 인해 정국은 혼란에 빠지고 경제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치적 공범’ 국민의힘을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전북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대한민국을 가두 메운 국민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 추운 겨울로 나선 국민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탄핵안 거부, 민심 거스른 행위”

전북 시장·군수 “尹,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는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된 것과 관련 “민심을 거스른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시장·군수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외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약 6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40여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을 잃었다”며 “탄핵안 거부하는 국민

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농식품부 장관, 내란 진상규명 협조하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지난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밤 열린 헌정 유력 계엄 선포, 내란 모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택 의원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반한 초유의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하였다.”고 하며,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하여 국

회위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 시도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는 등 엄중내란 사태가 벌어졌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충부리를 겨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헌을 문란케 하고 대한민국의 파괴를 시도한 내란의 책임자들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시에 개최한 국무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길